

건설소식

국가기술자격제도 확 바꾼다

평생경력개발 지원 · 인정기능사
폐지

노 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간 건설관련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고 '국제기술사자격 인정제도'를 도입, 국내 기술사에 대한 법적권한을 강화한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주는 '평생경력개발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반면 건설산업 등의 인정기능사 제도는 폐지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국가기술자격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올해부터 2009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간 인력이동이 활발해질 것을 대비, 국내 기술자격 취득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인재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 자격제도 국제화시대

건설·미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해외취업이 허용되고 IT 분야의 자격증이 상호 인정되는 국

가가 기존의 일본,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국가간 상호 인정되는 자격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 관련 기관, 산업별 협의체(SHRDC)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대상국을 중심으로 현지의 자격제도와 직업교육훈련과정·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해외자격증 취득자 수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기술사자격 인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사자격 상호 인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기술사자격 인정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기술사의 전문성 강화

고유업역이 설정되는 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공사규모, 인력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공사·감리 책임자인 기술사의 현장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PQ 심사 등 입찰평가 수행 때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기술사의 자격, 경력, 학력 정보망 등이 연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사제도심의위원회'와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를 구성해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자격취득 사후관리 · 불법대여 근절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경력개발 모델이 ‘평생경력개발 지원제도’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단계별로 필요한 자격증과 교육훈련과정 등을 제시해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직접 관리한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경력개발설계서’를 양성해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자격취득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자격취득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자동차정비 등 10개 종목에 한해 시범 실시되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특히 자격취득자가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우대 방안을 제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에 대한 콘텐츠가 적정 수준 확보되도록 전문단체 · 협회 등과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자격증을 불법대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 자격취득자 우대 · 인정자격제도 폐지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수를 늘리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자격취득자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이들의 정규교육 진입(Work to School)이 용이하도록 대학 수시 · 특별전형에 자격증 취득여부를 반영하고 학점은행제의 자격과 학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는 기업에는 직업능력 개발에 따른 지원 비용을 제공하고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과 병역특례지정업체를 선정할 때도 자격취득자 보유비율을 반영한다.

노동부는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 · 고급 ·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 · 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수도권 신도시
압축형으로 개발

건교부, 용적률 250%로 확대

향후 조성될 수도권 신도시가 고밀도 방식으로 개발된다.

이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는 주거용지 면적 감축과 녹지, 공원면적 확대를 통해 해소한다.

건설교통부는 대한국토 · 도시계

획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적 압축형 신도시 개발방안’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 한 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신도시계획 기준 개정안’에 반영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고서의 골자는 현행 물량 확대에 치중된 국내 신도시 건설방식을 지양하면서도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형, 압축형 도시(Compact City)개발방식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용적률 확대, 건폐율 축소와 용지배분 비율 조정이라는 방식이 활용된다.

인구 3만명 규모의 신도시의 경우 주거용지와 주상복합용지의 용적률은 250%와 600%까지 늘리되 전체 부지 내 용지면적은 줄일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 방식에 의한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밀도는 현행 ha당 150명에서 300명으로 고밀화 되지만 녹지와 공원용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거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저밀도, 녹지공간 확보라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정책상 필요한 토지이용 효율까지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를 위해 건축물 형태를 판상형이 아닌 탑상형으로 유도해 일조 · 통풍권을 개선하고 현 초등

학교 중심의 주거지, 근린공원, 공공 및 상업시설 배치방식도 고등학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학회는 “이 같은 방식을 실제 시물레이션한 결과 공원·녹지·광장·하천 등 오픈스페이스는 현행 도시형태보다 21.3% 늘어나는 반면 주거용지와 도로용지는 각각 10.6%와 9.6%씩 줄었다”고 밝혔다.

입찰행정 투명화 바람 분다

도공, 설계심의장 모니터로 공개

공공공사 입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발주기관들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제10호선 장흥~광양 간 건설공사 8·9공구의 대안설계심의를 진행하는 내내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심의장안을 공개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심의장 밖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심의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심의장 밖의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심의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과거처럼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초조하게 기다릴 필

요가 없게 됐다.

심의장을 찾은 H건설 관계자는 “과거에는 심의장 안의 소식이 궁금해 발주기관 관계자들의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이리저리 몰리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서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많은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턴키방식인 동남권이주 전문상가 건설공사의 설계심의를 수행하면서 눈에 띄는 보안장치를 마련했다.

통신탐지회사를 동원해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선전화기가 도청되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감사관들이 직접 선임된 평가위원들을 심의장까지 데리고 오도록 했다.

건교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주시 국대도와 광양시 국대도 등 2건 공사의 설계심의를 진행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장소 선정 등 심의 전 과정을 매뉴얼화해 적용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아 현재 전국적인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및 평가 매뉴얼로 사용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일고 있다.

조달청은 현장설명이 이뤄진 공사부터 총입찰금액 뿐 아니라 33개 공정별 입찰금액까지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 면접채용 특례 유지

정부, 고용허가제 도입방향 합의

고용허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올해에도 자체 면접을 통한 건설업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가 현장 안전관리 등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 건설근로자 사후관리 권한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 보전 여부 등의 향배는 추후 별도로 논의해 결정된다.

건설교통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세부업무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창구를 고용허가제로 단일화하되 현행 산업연수생제는 폐지한다.

또 민간 대행기관 업무를 취업교육과 사용자(기업) 편의업무로 제한하고 근로자 사후관리는 공공기관이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개별 면접방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건설부문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중요한 업종의 특성을 고려, 면접을 통한 선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고용방식 어떻게 바꾸나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인력수요 기업이 민간 대행기관에 의뢰해 현지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필요한 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개별 기업이나 인력 추천기관을 활용한 현지 면접 방식의 인력선발이 금지된다.

노동부가 인력송출 대상국 노동부처와 공동 구축한 해외근로자 인력풀에 따라 수요인력의 5배수를 추천하면 서류상의 인력정보만으로 필요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건교부, 노동부간 격론 끝에 건설업에 한해서 노동부 인력풀상의 5배수 가운데 서류상 적격자 2배수를 선별, 별도 현지 면접을 허용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100명의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건설업체는 노동부 인력풀에 수록된 500명의 추천을 받아 이 가운데 200명의 적격자를 서류상으로 선별하고 현지 면접으로 최종 100명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대한건설협회 외국인연수단 관계자는 “현지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건설현장 근로자를 채용하면 실제 기능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기 어려

운 것은 물론 안전문제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설득이 주효했다”며 “대신 건설인력 대행기관 지위를 시행령이 아닌 고시에 담자는 노동부의 주장은 그 반대급부로 수용이 불가피했고, 이에 따른 민간대행기관의 법적 지위 약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해외인력 관리권은 대립 중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사후관리를 누가 담당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인력송출 비리, 인권문제 등을 우려해 공공주체인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도 아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민간 기능은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허가서 신청, 수령 등 수요자인 기업의 편의관련 업무와 해외 고용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업체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 대행기관이 근로자 관리를 동시에 수행할 것을 주장했다.

비효율적인 공공보다는 수요자인 기업의 현실과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민간 쪽 업종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까지 연계 수행해야 건설인력난을 효과적으로 타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외국인 건설근로자 관리와

대행기관 관리에 시민단체 등을 개입시키는 것도 제3자의 간섭만 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 의견으로 분명히 했다.

업계는 나아가 민간의 사후관리업무 인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도 국가에서 일부 지원·보전함으로써 인력난에 따라 기업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채용 관련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 고용허가제 올해 시행 불확실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관련 개선안이 올해부터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세부 시행방향에 대한 정부부처간 합의는 물론 노동부 내부의 방침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제6차 외국인력고용위원회에서 4개 인력대행단체와의 합의조정안에 동의했지만 1주일 새 이 방침을 뒤집었고 그 후 다시 건설부문 특례를 인정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현행 산업연수생제를 유지해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하되 기업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이 시행되더라도 별도 의원입법안이 관철될 경우 현행 외국인력 고용제도 자체가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조실 주재의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부처간 합의만 이뤄지면 곧바로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또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도입·관리를 맡고 추천기관인 민간 기관 참여를 기업 쪽 관리부문 등에 한정한다는 기본방침에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전자카드 2008년 전국 확대

우수사업장엔 인센티브 제공

| 건 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 보험 전자카드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조병기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장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전자카드 발 전방안 토론회에서 “전자카드 신고를 2008년 1월 1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노사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카드 우수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장관 표창 및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팀장은 또 “전자카드제도의 전국확대에 앞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경인지역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확대하고 지난 해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카드리더기 구입비용을 지

원하는 한편 전자카드를 연간 100회 이상 사용한 일용근로자에게 소정금액의 경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지속적으로 부가해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건강검진, 안전교육, 안전모 지급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산업안전 기능과의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토론회에는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자카드제도 정착을 위한 여건조성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지정토론회에서는 김영한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서기관, 조병기 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



도박을 너무 좋아한 백작 - 샌드위치

빵과 빵 사이에 고기라든가 야채를 끼워 넣어 먹는 샌드위치 (sandwich). 요즘 아침 식사를 이 샌드위치 하나로 간단히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1718년 11월 3일, 영국의 정치가 존 몬택 샌드위치 백작은 그 날도 친구들과 한창 카드놀이에 빠져 있었다. 카드놀이를 무척 좋아했던 그는 종종 식사시간을 넘기곤 했는데, 그날도 몇 번이나 하인이 모시러 온 후에야 마지못해 식당으로 갔다.

그런데 그는 식사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는 시간도 아끼고 식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한 생각이 떠

올라 직접 주방으로 갔다. 그는 호밀빵의 가운데를 잘라 그 사이에 야채와 베이컨 몇 조각을 넣은 다음 부리나케 카드판으로 돌아와, 그것을 먹으면서 다시 게임에 열중했다.

당시만 해도 그런 식사법은 귀족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파격이었다. 하지만 도박장의 귀족들은 모두 샌드위치 백작을 따라서 했고, 이 식사법은 점차 널리 퍼져 나갔다. 샌드위치 백작의 이름을 그대로 딴 대용식 샌드위치.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는 그렇게, 도박을 좋아하는 한 백작에 의해 탄생했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